

한국언론정보학회 20년, 비판적 학술운동의 고민과 한계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은규**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창립된지 20년이 지났다. 이 글은 비판적 학술운동이라는 창립정신으로 출발했던 학회의 2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정체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논문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1980년대 후반에 태동되었던 비판적 학술운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는 비판언론학 진영의 학술운동을 표방하며 출발했던 ‘한국사회언론연구회’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구체적으로 학회의 창립 배경과 창립정신에 기반한 학술연대 운동, 언론연대 운동, 현안 대응 연대 운동 등의 활동을 점검한다. 셋째는 한국언론정보학회로 전환한 이후 학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점검이다. 학회의 20년을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비판언론학의 학문적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회의 외연 역시 성장하였다. 하지만 학회의 초기 정신과 정체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결론적으로 학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유기적 학술회의의 조직, 학보 정체성 강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분과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비판적 학술운동, 학술공동체

* sjkim@skhu.ac.kr

** kimegy@woosuk.ac.kr

1. 들어가는 말

한국언론정보학회(이하 학회)가 첫 걸음을 댄 지 20년이 지났다. 엄밀히 말해, 학회의 발자취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 1988년부터 1998년 2월까지의 ‘한국사회언론연구회’의 시기가 그 하나이며, 이후 연구회의 틀을 벗고 명실상부한 학회로 거듭난 1998년 2월부터 지금까지의 시기가 또 다른 하나이다. 20년의 세월 속에서 학회는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소수의 젊은 연구자들로 출발했던 연구회가 회원수 500여 명에 이르는 대중적 연구단체로 성장했다. 또한 경험론적 실증주의 중심이던 언론학 영역에 비판언론학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학문적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한편으로 변화된 사회적 상황은 학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학술운동을 표방했던 학회의 창립 정신이 그 맥락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서부터,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이러한 창립정신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질문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학회 창립 20주년의 시점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정체성과 방향성 모색이라는 전체 고민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 즉 초기 비판적 학술운동이라는 문제의식이 그간의 학회 활동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되돌아보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회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글은 비판언론학의 내용성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비판적 학술운동 단체로서의 학회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한국사회 비판적 학술운동 일반의 성장과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는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시기의 학술운동 고민과 실천활동을 점검하는 부분이다. 셋째는 1998년 이후 한국언론정보학회 시기의 비판적 실천활동의 내용을 살펴본다.

2. 비판적 학술운동의 성장과 변화

1) ‘과학의 운동화’로서 비판적 학술운동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의 젊은 연구자 집단을 중심으로 학술운동이란 용어가 제기되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이 당대의 시대상황과 분리될 수 없듯이 학술운동 역시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한 모순과 이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반영한다.

김동춘(1988a)은 당시 학술운동의 성격을 ‘과학의 운동화’로 제시하고, 이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학문과 과학의 자기변신 측면이다. 무릇 학문과 과학의 본질은 세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체계의 수립이다. 하지만 한국의 근현대 과정에서 학문과 과학은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배층의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특히 국가 수립 및 근대화 과정에서 개입된 서구 이데올로기와 학문적 방법론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모순을 외면하거나 이를 포장하는 데 복무했던 것이다. 때문에 해당 사회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성실하게 설명하는 학문의 자기변신 자체가 학문과 과학의 운동화로서 학술운동의 한 차원을 구성한다.

둘째는 과학의 대중화 측면이다. 학문과 과학이 대중과 유리되어 오로지 학문 내적 영역에서만 존재하고 그 안에서 교환되고 비판된다면 학문적 본질에서 비껴나게 된다. 때문에 과학과 학문은 해당 사회의 대중적 삶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사회를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다. 학술운동으로서 과학의 대중화는 자기변신과도 연관된다. 한국 사회의 대중이 요구했던 사회변화의 요구를 도구적 학문적 틀과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내고, 이를 다시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에게 복무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회변화 운동의 토대로서 과학이라는 측면이다. 학문과 과학이 사회운동과 접목하는 것은 대중들이 형성해온 사상과 이념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과학과 학문이 자신의 권위에서 벗어나 사회발전은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과 합류하여 그것에 용해될 때, 이는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사회변화를 위한 하나의 토대로 자리한다. 과학의 운동화로서 학술운동은 이처럼 사회변화를 위한 논리적,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의 운동화로서 위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나타난다. 과학의 자기변신은 기존의 방법론적 전제에 대한 비판, 사회문제 분석을 위해 설명력을 지닌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개발, 해당 사회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발 등으로 나타난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지배권력이 축적해온 과학적 논리, 그리고 대중들의 의식과 이데올로기 재생산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의 운동화는 필연적으로 사회변화를 위한 이념적, 실천적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한편, 과학의 운동화로서 학술운동의 주체적 조건은 연구자 및 지식인의 전문성과 집합성이라는 측면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매개로 하여 학술운동적 과제에 복무하기도 하고, 연구자 집단의 집합행동을 통하여 학술운동적 과제에 부응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문성과 집합성은 서로 조응함으로써 학술운동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김동춘, 1988a, 115~116쪽). 현실적으로 이러한 학술운동의 주체적 조건들은 개별 분과학문별 연구공동체, 연구자 집단으로 발현된다. 실제, 1980년대 후반 학술운동을 표방했던 젊은 연구자 집단들이 이러한 학술운동의 주체적 상황을 대변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과학의 운동화로서 학술운동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공고화하거나 외면하는 기존의 학문체계에 대한 탈피, 그리고 사회변화에 복무하는 과학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때문에 학술운동은 필연적으로 비판성과 진보성¹⁾을 내포한다.

1) 비판성과 진보성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사회 맥락적인 개념이다.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회변화에 따라 ‘무엇이 진보성이고, 무엇이 비판성인가’라는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시대 상황에 따른 두 개념의 내용을 논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2) 학술운동의 태동과 비판적 학술공동체의 형성

한국사회에서 ‘학술운동’의 태두는 한국 근현대 사회의 모순 극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일제 식민 상황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새로운 모순을 떠안게 된다. 미군정 체제를 거친 뒤 수립된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정치경제 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세계 초강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학문 체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식 실증주의 패러다임이 한국사회의 주류 과학으로 이식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사회문화 정책 및 학문과 지식체계의 재생산 구조로 공고화됐다.

예컨대, 1946년에 진행된 ‘국대안 파동’은 미국식 교육체제의 한국 이식과 관련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6년에 마련된 ‘국립서울대학안’은 초대 총장으로 미국인을 임명하였고, 이사 3인 역시 미국인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의 관료화, 군정의 학원 간섭, 학원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제기하며 반대운동이 전개되었지만 미군정은 애초의 계획을 관철시켰다. 또한 ‘미국정보교육교환법’에 의거한 한미교환교수협정이 맺어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한국 내 지식인들이 미국의 학문 체제에 편입되도록 하였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정치사회적, 학문적 체제가 대미 종속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낳았다(김동춘, 1988a, 92~93쪽).

정부수립 이후 개발독재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군사독재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학문적 패러다임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상황이 결부되면서 식민시대 사상적 흐름의 한 축을 형성했던 맑스주의는 엄금되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은 한편으로는 인문사회과학의 수요를 키우기도 했지만, 영미식 실증주의 학문의 패러다임에 대한 경도는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었으며, 반민주적인 정권의 논리를 개발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기능했다. 요컨대, 학문은 비역사적이었고, 한국사회는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이기 이전에 수입된 이론을 실험하는 조작의 대상이었던 것이

다(최갑수, 1998, 103쪽).

해방 후 분단국가의 수립과 개발독재는 한국사회에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라는 중층적인 사회적 모순을 축적했다. 하지만 영미 위주로 이식된 인문사회학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축적된 모순을 설명하지 못했다. 물론, 한국사회의 모순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960년 4·19 이후 1970, 1980년대를 거치면서 반독재 민주화를 추진했던 지식인들이 비판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서구에서 돌아온 학자들이 서구문명에 대한 비판이론들을 소개하면서 학술운동의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종속이론’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지식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종속이론은 저개발국가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변혁운동의 현실에 바탕을 둔 대안이론이었다는 점에서 지식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종속이론의 맥락에서 도시빈민론, 주변부자본주의론, 생산양식접합론 등이 논제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준거틀로 활용되었고, 변혁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다(김동춘, 1988a, 97쪽).

주류 학문이 지배체제의 도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을 때,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변혁운동으로 발현되었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재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의 외세의존과 구조적 불평등, 비민주적 억압체제라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재야운동 등의 부문운동이 성장하면서 민족민주운동, 변혁운동의 흐름을 형성했다. 이들 진영은 한국의 모순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이론과 전략을 체계화하는 가운데 운동의 자양분을 축적했다. 그리고 1987년의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1987년을 계기로 억압적이었던 한국사회에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며, 시민사회 영역이 확장되면서 민주화 이행기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비판적 학술운동은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변혁운동의 성장과 함께 학술역시 본래의 과학성과 실천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학술운동이 학술영역 자체의 자생적 추동력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변혁운동,

민족민주운동으로부터 운동성을 부여받음으로써 학술운동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성국, 1991; 김동춘, 1999). 아울러 1980년대 후반 한국 변혁운동론의 방법론 논쟁으로 부각되었던 사회구성체 논쟁(NL-PD)이 비판적 학술운동의 일정한 지식계보를 형성하였던 것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최형익, 2003).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변혁운동과 이의 이론화 작업들이 비판적 학술운동의 외연적 조건이었다면, 198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젊은 연구자들의 확장은 주체적 조건을 형성했다. 변혁운동과 궤를 같이하면서 운동성을 지향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대량 창출된 것이다. 산업화의 물질적 수혜를 받고 자란 이들은 1980년의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모순을 직시했다. 실제, 1980년대 비판적 학술운동을 전개했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연구자들은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로 광주항쟁을 제시하고 있다(금인숙, 1999). 이들은 기존의 주류 학문이 한국의 모순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무능하거나 외면하는 양상에 회의를 품었다. 이에 따른 대안적 이론의 틀을 모색하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패러다임과 방법론들을 받아들였다.

한편, 젊은 연구자들의 사회적 존재양식의 문제 역시 연구자들의 집단화와 운동성 획득의 주체적 조건으로 설명된다(김동춘, 1999). 젊은 연구자들은 대체로 비제도권 소장학자와 대학원생 층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의 전임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만 연구자로서의 사회경제적 일차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 대학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대학교원으로서의 진입은 여전히 바늘구멍이었고, 학맥과 인맥의 한국적 관계는 젊은 연구자들과 전임교원의 관계를 기형적으로 형성하게 했다. 또한 소위 주류 학문의 재생산 구조가 공고화된 속에서 비판적 젊은 연구자들의 진로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존재 조건은 그동안 개별적인 방식에 의해 해결되어왔다. 경제적 어려움과 부조리를 감수하고 학문을 계속하든지, 혹은 연구 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져온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 젊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학문 사회의 구조

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것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화를 시도했으며, 이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처럼 198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젊은 연구자들의 현실인식과 집단의식은 비판적 학술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비판적 학술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으면서 학술운동은 비판적 학술공동체의 결성으로 구체화된다. 이 학술공동체들은 1980년대 이후의 해직 교수와 대학원에 진학한 비판적 연구자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연구실의 형태로 운영되던 학술공동체는 점차 분과학문별로 세분화되면서 연구단체의 단계로 진입한다. 1984년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 이후, 망원한국국사연구실(1984), 역사문제연구소(1986), 한국근대사연구회(1987), 문학예술연구회(1987), 사회철학연구실(1987), 여성사연구회(1987), 한국정치연구회(1987), 한국사회언론연구회(1988), 한국농어촌연구소(1988) 등 각 학문분야별로 연구단체가 결성되었다.

나아가 개별 연구회의 연대 조직인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가 1988년 11월 발족된다. 당시 창립선언문은 학단협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의 편에 서서 인간해방의 길로 나서야 할 우리 학문의 실상이 과연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1980년대에 들어 이루어진 적지 않은 학술연구단체의 결성은 1980년 이후 민중역량의 눈부신 고양에 힘입은 것이다. 이들 학술단체들은 학문사회 내부의 새로운 학풍수립 요구라는 데서 비롯된 것만은 결코 아니며, 민중들의 피땀으로 획득된 사회적 공간에서 마련되었던 까닭에 설득력 있는 사회발전전망에 대한 그들의 강렬한 기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학문연구와 학술운동은 결코 상아탑 속에 자족할 수 없는 것이다. 연구활동의 조직화를 통해 과학적 인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대중과 공유하는 일은 학술연구자의 역사적 임무인 것이다”(학단협, 1999).

학단협의 창립선언문에서 보이듯, 비판적 학술공동체 및 학술 연대조직의 활동은 학술활동을 통한 실천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비판적 연구공동체를 통한 ‘과학의 운동화’가 모색되었고(김동춘, 1988b), 과학적

연구집단이 학문적, 문화적 종속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항담론을 구성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실천 활동을 전개했다(금인숙, 1999).

3) 1990년대 이후 학술공동체의 변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비판적 학술운동은 대학 및 지식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비판적 학술활동이 대중화되면서 학술운동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비판적 방법론들이 각 분과학문별로 진입했고,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금기들이 깨뜨려져 갔으며,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아울러 연대활동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학계의 비판 역시 촉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비판적 학술운동이 성장하면서 보여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비판적 학술운동은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그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학술운동 진영은 철 지난 바닷가와 같은 삭막함 속에서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조현연, 1999). 비판적 학술운동 진영의 약화는 학문정책의 국가적 제도화라는 외부적 요인과 학술운동 주체들의 제도화 편입 및 파편화라는 주체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1990년대는 노태우 정권으로 맥을 이었던 군사정권이 퇴장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간정권이 들어섰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철저적 민주화를 일궈내고 민주화 이행기 국면을 맞이했던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거센 파고가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했고, 교육과 학문 영역 역시 이를 비켜갈 수 없었다. 1995년 5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 교육개혁안)이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명칭에서도 보여 주듯이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임재홍, 2005). 5.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은 김대중 정권의 ‘신지식인론’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신지식인론은

무한경쟁의 사회관, 경제적 가치에 따른 지식과 인간의 재단, 성공지상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교육부문에서 엘리트 중심의 수월성 교육으로 바뀌어나가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천보선, 2000). 이처럼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따라 대학과 지식사회에도 경쟁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대학의 구조조정, 연봉제, 계약제 등이 시작되었고, 연구실적 외에도 프로젝트 수행실적, 산학협동 실적, 사회봉사 등 각종 활동이 계량적 지표로 환산되었고, 이는 학술공동체의 지식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의 학술공동체의 관리와 통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을 통해 진행됐다. 학진의 학술진흥지원제도는 평가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았든 간에 학술공동체를 통제하고 지식생산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진은 연구시스템의 체계화와 수량화, 검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식사회의 자기 갱신을 강제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비제도권이라 불렀던 비판적 학술공동체까지 포섭하게 되었다(김원, 2008, 44쪽). 실제 1980년대에 결성된 비판적 학술운동 단체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회’에서 ‘학회’로 전환했고, 그동안의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학진의 등재지 평가와 연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비판적 학술운동 단체의 ‘연구회’에서 ‘학회’로의 자기변신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대신 학술운동 조직의 정체성 약화를 수반했다.

한편, 비판적 학술운동의 약화와 관련 주체적 요인은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1980년대 비판적 학술운동을 주도했던 주체들이 대학 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파편화되었다는 것이다. 초기 젊은 연구자 그룹을 형성했던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강사 혹은 박사과정의 신분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비판적 학문 영역이 대학 내로 수용됨에 따라 활동의 중심축이 이동되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소장에서 중진으로 비중이 커졌다. 여기에 국가적 학문정책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계량화된 평가시스템에 적응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학술운동 차원의 활동이 부차적인 순위로 밀려나면서 개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또한 1980년 후반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이념적 혼란을 가져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초기의 주체들이 비운 자리에

후속세대가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학문후속세대들은 1980~1990년대 중반의 비판적 학술운동의 맥락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학문 정책의 수혜 속에서 각종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연구 성과 생산에 경쟁적으로 내몰려 있다. 그렇다고 연구자로서의 앞날이 양양한 것도 아니다. 연구자로서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외 학위 취득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풍토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의 학문후속세대들이 학술운동의 주체로서 재생산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언론정보학회와 그 회원들에게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부분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비판적 연구자들이 제도권에 진입한 것이, 학문후속세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수도권 또는 큰 대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판적 학술운동의 위상은 이처럼 주객관적 조건과 맞물려 극도로 약화된 상황이다. 비판적 학술운동의 방법과 주체의 문제가 보다 폭넓게 고민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학술운동은 제도적 그물망에 갇힌 채 학단협이라는 상징성으로 남아 있다는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의 비판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다. 이들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비판적 학술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경계의 확장’(김원, 2008), ‘장의 확장과 집단성의 획득’(권경우, 2002), ‘대중성과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고민’(오창은, 2002)의 틀 속에서 실천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사회언론연구회의 창립과 학술운동에 대한 고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한국 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1980년 5월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로 다시 암흑의 시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몇 개월의 해방 시기는 변혁의 씨를 뿌렸다. 사회 전체는 물론 학문 영역에서도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과 변혁 이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언론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실증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을 극복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1980년대 학문 후속 세대들은 엄혹한 5공 정권이 1987년 6월 항쟁,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민주화로 가는 여정에 집단적 학문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 귀결이 1988년 2월 15일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회의 창립이다. 그리고 1988년 8월 17일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한국사회언론연구회(이하 한언연)로 개칭하였다.

당시 연구회를 창립하면서 가졌던 고민과 문제의식은 연구회의 회보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회보 창간사는 한국 사회의 모순 극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자기비판을 전제로 기존 학문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학문에 대해 비판·극복이 필요한 것은) 이른바 ‘객관성’과 ‘가치중립’이란 미명 하에 커뮤니케이션학적 지식이 권력의 정당성을 높여주고 나아가 체제유지를 위해 기능해왔던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서구 이론 및 그 접근방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연구자의 인식론적 전횡에 기인한다.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식론적 편중성의 극복과 방법론적 자기반성의 필요와 당위가 바로 이곳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연구 영역의 확대와 방법론적 다양성을 억압해왔던 금기 사항을 깨고 학문에 대한 상품적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ना야 하는 명분이 도출되는 상황을 제시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이곳은 커뮤니케이션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또한 변혁기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구조 극복을 위한 실천의 장이 될 것이다. 즉 한국 사회의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데는 지성을 전제로 한 실천보다 실천을 전제로 한 지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최우선으로 하여”(한국사회언론연구회, 1988, 3쪽).

이러한 취지는 창립 초기 선전·선동분과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선전·선동분과는 그 명칭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언론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운동, 편집권 독립 주장,

대안언론인 대학언론과 노동자 신문의 활성화라는 당시 상황을 생산대중의 실질적 접근의 보장인가 아니면 지배 계급의 또 다른 지배방식의 표면적 변화에 불과한가, 후자라면 이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었다(한국사회언론연구회, 1988, 7쪽). 즉 언론을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실천적인 힘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물론 한언연이 실천을 위한 전위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은 아니었다. 전위론을 주장하는 측과 이론을 통한 실천을 주장하는 측의 대립이 있고, 후자가 일정 부분 대세를 잡았음도 물론이다.

“지난(1988년) 1월 연구회 창립 준비모임에서 제기되었던 본 연구회의 ‘방향성’ 논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회가 담보해낼 내용이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정립해내는 학술운동’인가, 아니면 ‘한국사회와 그 하부 체계인 언론을 변혁시키는 전위로서의 실천 운동’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다. 여기서 전자의 논리는 학문을 통한 운동이 실천운동과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전위단체와 대중단체의 역할 차이처럼 특수성을 지닌다는 것이었고, 후자는 기존 커뮤니케이션학의 보수적인 내용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전위적 성격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섯 시간 이상 계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대립 속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는데, 결국 학술운동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전위단체이기를 주장한 일부 사람들이 본 연구회への 참여를 거부하였다”(이진로, 1988, 20쪽)는 것이다.

그러나 이진로의 정리에서 언급하였듯이 회원 다수가 전위임을 부정하였더라도 그 실천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위와 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한언연의 결성이 실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위로서 역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 학술 연구조직이 아닌 학술운동 조직으로서 실천과 연대는 당시 연구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고민은 1989년 2월 11일 수련회 논의과정에서 정리된 바 있다.

학술운동에 관해 발제를 맡은 신태섭(1989)은 당시 정세의 핵심을 운동, 투쟁 영역의 확장이라고 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학술운동의 자기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31~34쪽). 그에 따르면 학술운동의 주체는 중간층 지식인 중 비판적인 학술연구자 대중이라고 보아야 하며, 총체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의 한 부분을 맡아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전체운동을 주력 부분과 외곽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학술운동은 외곽부분 민중 문화운동의 한 부분이라는 위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이데올로기투쟁 중 전문적 학술연구가 개입되는 모든 부분에서 만나는 전체 민중, 다른 말로 표현하여 모든 부분운동들과 전체운동 자체가 학술운동이 궁극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며, 전체 변혁운동의 기본과제와 연계하여 학술운동의 과제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전략적인 측면에서 “각계각층 민중이 변혁의 주체로 서게끔 의식화, 조직화하는 데 학술운동이 실천을 통해 복무하는 것”이므로 “학술운동의 과제를 담당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동의 그릇인 조직의 정비, 학술연구의 전문성 제고, 학술운동의 올바른 입장 확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술운동은 “① 전문적 기능 단위와 ② ‘연구자-관련대중-일반대중’의 조직 단위가 수평·수직으로 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① 당파성, ② 과학성, ③ 대중성, ④ 조직성 등(과), 대중에 의한 신뢰 확보”가 활동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각 단위 조직을 강화하고, 학술운동체들 간의 연대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타 운동단체들과도 연대성을 확보하고, 고유한 이론을 정립하여 연구 무기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이 결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통망 확대를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는 김서중(1989)의 한언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으로 이어졌다(34쪽). 한언연이 학술운동단체라는 사실은 공유하였지만, “학술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이나 그것을 엄밀하게 규정해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못하였”는데, 이는 “민중지향적인 학문연구보다는 기존의 반민중적 학문경향과 학자들의 태도에 대한 반발”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학술운동’이 학술중심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운동중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것과 같은 비생산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고 학술운동에서 “학술 작업의 결과가 대중적 확산을 통해 운동성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상실하는 허울뿐인 학술운동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반성하였다. 물론 “한언연은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실천적 작업으로서 대중적인 운동을 벌여야 하며 유관 대중운동단체와의 연계를 유지해야만” 하고, “단순히 행동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여타 운동단체와 차별성을 지적하였다.

당시 발제자 두 사람만이 아니라 수련회 참가자들의 공감을 전한 이용준(1989, 30쪽)은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학술운동의 위상은 전체 변혁운동의 틀거리 속에서 위치지워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술운동 속에서 생산된 이론은 이론주의, 이론 완결성에 함몰되지 말고, 전체 변혁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실천력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이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술운동자는 현금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담지해내야 하며, 변혁운동에 대한 감각도 끊임없이 단련시켜야 한다. … 학술운동의 기층 민중운동으로의 전회는 학술운동의 고유한 공간은 아니다. 오히려 학술운동의 실천적 과제는 전체 변혁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실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분석하여 민중들에게 폭로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한언연은 과학적 이론의 생산을 위한 학술연구 작업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변혁운동에 직접 복무할 수 있는 제반 사업, 즉 언론매체의 지배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는 매체 비평 사업, 민중운동부분과의 연계성 확보, 언론매체 투쟁의 측면지원, 대외 공개강좌 사업 등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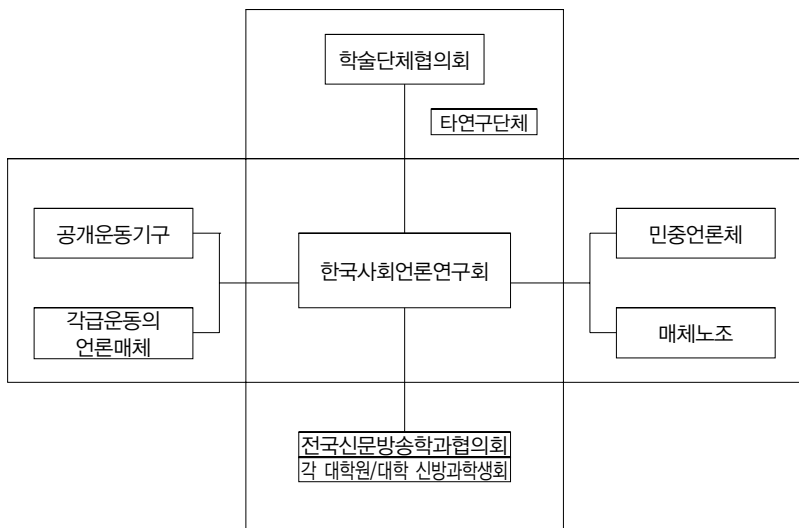
강한 실천력을 담보한 학술운동단체로서 한언연을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당시의 논의들은 학술운동에 관한 일반적인 사고 못지않게 1987년 체제 속에서 나타나는 민주화 더 나아가 강한 변혁 요구의 반영이고,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술 집단의 개별적 특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학문이 학문을 위한 재생산에 불과하거나, 학문의 성과가 대중과 유리되어 사회적 기여가 없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변혁에 기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역행하는 기존의 학문 경향에 대한 반성과 그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러한 공감은 학회로 전환한 지금까지도 유효한 문제의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항제(1989)는 이러한 고민을 밑바탕으로 매체비평과 같은 실천적인 학술 활동은 물론 연대사업의 확대 강화를 주장하며, “학술운동체의 기본 연대인 각 학교의 대학원 자치회, 전국신방과협의회 및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 외에도 언론, 문화의 부문 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공개운동기구(민주언론운동 협의회, 민중문화운동연합 등), 매체노조, 각급운동의 선전·선동체 등이 기본적인 연대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한 연락선 개설이나 인적 유대뿐만이 아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속에서 단일한 대외 결성이 목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술운동의 연대틀을 제시하였다”(7쪽).

<그림 3> 한언련 학술운동의 연대 구조

가로: 언론운동, 세로: 학술운동



4. 한국사회언론연구회의 활동

한언연의 활동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지향의 학술 활동과 더불어 학술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조향제의 분류에 따르면 학술운동과 언론운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언연 시절 각종 분과 활동과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발표회는 한언연이 학술연구 집단이지만 그 학술 활동이 운동 지향이었음을 나타낸다. 정치경제학적 언론 분석, 문화운동론적인 문화 연구, 실증주의적 학문 연구 경향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을 위한 언론사·사상 연구, 더 나아가 대항언론의 존재양식과 그 기능성에 대한 탐구 등이 초기 한언연 연구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자 집단으로서 학문적 깊이와 체계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음은 물론, 연구결과들이 언론의 모순 극복과 새로운 언론 지향을 위한 기본 논의와 대안 추구를 지향하였다.

1) 학술 연대 운동

하지만 기존 학술 연구집단과 구별할 수 있는 한언연의 활동은 학술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의 다양한 양식에 있었다. 그 첫째는 여타 학술연구단체들과 연합 학술 활동을 통해 총체적인 사회분석과 대안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즉 학단협의 일원으로 사회 제 현상에 대한 비판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에 동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 운동단체와 연합하여 현실 변혁에 일조하는 운동이다. 물론 학술단체의 참여라는 상징성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운동은 현실 운동단체들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여 학술적 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실 과제해결의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학단협에 가입한 것은 언론분야의 개별 학술운동의 틀을 넘어서 전체 사회 변혁을 위한 학술운동에 동참하기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언론현상 연구에 매몰될 수 있는 분과학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로로서 의미도 갖는 것으로서 학술운동단체를 지향하는 한언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 당시 박용규(1989)는 “1988년 11월 5일에 이대에서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의

창립총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각 학술단체의 회원들은 물론 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소장급 교수들과 일부 중진급 교수들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학단협의 결성은 그동안 개별 학술단체들의 활동이 보여준 고립 분산성을 극복하고 변혁운동과 연관된 실천적 과제에 대한 연구단체 연합의 공동작업의 장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운동의 주체 역량 강화의 한 계기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단협 결성의 주요 성과는 전체 변혁운동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는 학술운동의 실천적 자기 전망을 분명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28쪽)고 평가하였다.

아직 학문 후속세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한언연의 한계상 직접 관련을 맺기 어려운 비판적 중진 교수들이 연합단체에 고문, 대표, 운영위원 등 다양한 위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언연과 학문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다. 학단협은 창립 당시부터 연례적으로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한언연은 심포지엄에 꾸준히 참여하였지만 박용규(1989)가 학단협과 관련하여 “이를 전제로 변혁 운동과 관련된 실천적 과제에 대한 여타 학술단체와의 공동작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수적으로 개별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연구회의 주체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던 바와 달리 소수에게 참여가 집중되고, 학단협 활동과 한언연의 활동은 연례 심포지엄 참여와 운영위원회 대표의 회의 참석을 넘어서는 더 긴밀한 연대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는 사회과학의 중심에 서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인문학의 핵심인 철학 분야가 학단협 활동을 자연스럽게 주도하면서 한언연이 학문과 실천 논의에 적극 개입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학단협 활동을 한언연의 대외사업의 주요 통로로 생각하지 못했던 한언연 스스로의 한계도 있었다.

2) 언론 연대 운동

한언연의 또 다른 학술운동의 장은 언론 관련 단체들과 언론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간 부분이라 하겠다. 이들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청자 연대회의,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국민주 방송 등과 KBS, MBC 민주화운동 격려 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청자연대회의는 시청료거부운동에 적극 참여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한YMCA연맹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아시아민사회운동연구원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 1992년 10월 창립한 것으로 언론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들과 학술적 기반을 가진 한언연이 결합한 단체로서 한언연이 언론운동 영역으로 학술운동의 기반을 넓힌 사례라 하겠다.

시청자 연대회의의 대표적 활동 사례는 서울방송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비판활동이다. 1997년 1월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기독교방송, 교육방송 등 방송 4사가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백지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서울방송은 약진의 기회로 삼았으나 이 시기 서울 방송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시청자 연대회의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방송허가 재검토까지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서울방송을 견제하였다.

또 다른 지속적 연대활동은 선거보도 감시활동이었다. 1992년 2월 20일 한언연은 선거감시연대회의(이하 선감연)에 참여하였다. 선감연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여성민우회, KNCC 언론대책위 등이 참여한 것으로서 한언연은 이효성 회장이 공동대표, 김동민 대표간사가 독자시청자 위원장, 박선희가 기획위원, 손병우가 방송모니터 교육 요원으로 참여하였다. 선감연은 1992년 3월 24일 총선 이후 매 선거마다 구성하여 선거보도 감시를 통해 언론에 의한 선거 왜곡을 막기 위해 노력한 연대활동이었다. 하지만 이 선감연에서 한언연의 역할은 언론운동단체들의 역량이 성숙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기 한언연은 선감연의 활동이 끝나면 정리 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개입 발표 토론 등으로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과 제안에 기여하였다.

또 한언연은 기존 언론 개혁을 넘어 방송영역에서 한겨레신문과 같은 대안적 시민언론을 설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국민주방송설립추진범국민대표회

의(이하 국민주 방송)’에 적극 결합하였다. 1996년 12월 대표회의는 1999년 설립을 목표로 발기인 모집을 하고 여론화 작업을 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주방송은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족한 이후 그 정체성 논란 끝에 자진 해산하였다.

3) 현안 대응 연대 운동

한언연은 앞에서 언급한 지속적 연대 활동 이외에도 사회 변혁을 위한 기반으로 언론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현실 참여 활동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 KBS 민주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연대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한언연은 KBS 민주화 투쟁 당시 격려 방문한 것은 물론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 사태를 사회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모임을 통해 KBS 사태의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였다.

언론정보학회로 넘어가는 시점인 1998년에는 기자협회와 공동주최로 ‘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후술할 언론개혁시민연대 결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발제한 이효성은 소수언론이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을 막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은 언론산업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하지만 언론 간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고 새로운 언론의 출현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언론개혁 과제를 적시하였다.

한언연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그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는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경상대 교수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검찰이 소환장 발부 및 강제구인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학단협과 연대하여 성명서를 내고 한언연 회원들의 서명 참여를 통해 학문 탄압에 저항하는 연대운동을 전개하였다.

5. 한국언론정보학회로 전환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한국언론정보학회로 전환한 것은 연구자 소집단에서 정식 학회로 성장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분명 연구회의 양적 성장²⁾이 있었고,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학회로 전환하면서 학술연구자 대중화가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연구회 출발시 내세웠던 운동지향성이 희석, 위축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우려 또한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회로서는 존재의 질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학회로 전환한 것이었다.

물론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화, 쌍방향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은 연구회의 조직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더 많은 연구자 층을 흡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 분야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었다. 즉 한언연이 전문연구자 집단으로서 혹은 언론연구와 이론적 실천을 지향하는 운동단체로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은 변화의 와중에 있는 언론·정보환경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이론적으로 기여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적 이슈와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의롭고 보편타당한 처방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제도권과 변혁운동권, 이론연구와 이론적 실천,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와 같은 기존의 이분법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한언연이 서야 할 전략적 지점을 재탐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당시 1997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추진하고 요구했던 학회 등록과 학술지 등재 사업이 주는 압박, 연구회 설립 초기부터 겪어온 재정의 어려움 등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었다. 당시 판단은 학진의 요구를 수용하여 연구자인 회원 개개인

2) 수십 명의 예비 연구자들로 시작한 연구회는 10년의 기간 동안 외형상으로도 회원의 수가 150명을 헤아리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대다수 회원들은 전국 각지의 주요 대학과 언론 관계 연구소에 자리를 잡아 전문연구자로 성장하였다.

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학술지 등재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보편적이 되어버린 학진 등재지 중심의 연구업적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을 연구회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회로 전환 후 법인화를 꾀함으로써 일정한 재원 확보 기반을 갖추는 것도 불가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술운동단체로서 다른 학술연구단체와 차별성을 지녔던 한언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이미 기존에 유관 학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언론정보학회의 존재이유였다. 그리고 언론정보학회의 전환 초기 회원들 사이에서는, 실천을 전제로 한 학술 연구의 필요성이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특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학술 연구 활동의 본질이라는 한언연 설립 초기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존재했다. 따라서 언론정보학회 역시 학술운동 차원에서 학회 활동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활동

학회로 전환하면서 언론정보학회의 활동은 그 양과 질에서 연구회 시절에 비해 분명한 성장을 하였다. 그 활동을 학술운동의 관점에서 언론정책 관련 활동과 기타 미디어 쟁점, 그리고 사회적 쟁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1) 언론 정책 관련 활동

학술운동단체로서 언론정보학회의 활동은 왜곡된 언론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언론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그 왜곡된 구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한언연 시절과 마찬가지로 언론운동단체들과 결합하여 언론(구조)개혁 운동을 펼쳤다. 물론 학회 회원들이 언론개혁 의제의 이론적 제시에 결합했음은 물론이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

언론정보학회 전환 이후 언론개혁 활동은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8년 8월 27일 언론정보학회를 포함한 35개 언론·사회단체가 참여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창립대회를 열어 범국민적 언론민주화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구성은 시민언론운동단체,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언론학술운동단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회로서는 언론운동 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단체와 언론 관련 연대를 함으로써 학술운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학회는 언개연 창립 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음은 물론, 2000년 7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광고교육학회와 더불어 ‘신문광고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첫 주제로 잡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1일에는 ‘신문 판매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25일과 27일엔 각각 ‘신문사의 경영부실과 보도기능 위축’과 ‘신문시장 정상화를 통한 언론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신문개혁과 관련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신문독과점시장의 핵심을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올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언개연 주도 아래 이루어진, 2000년 11월의 ‘신문개혁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 발표, 2000년 12월의 국회 산하 언론발전위 설치 요구, 2001년 3월 30일 ‘신문개혁국민행동’ 참여 등을 통해 언론개혁 운동에 동참하였다. 또한 학술운동을 지향하는 학회로서 2001년 10월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 특별 세션으로 언론개혁을 다루는 등 언론개혁 운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2003년 6월 24~27일까지 매일 ‘신문개혁 대토론회’를 주관하였다.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 관련 입법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로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중연대가 경향신문과 함께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새언론포럼, 동아투위가 주관한 행사였다. 주제는 ‘지역언론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시장 정상화 해법을 찾아’, ‘정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 독과점 이대로 둘 것인가’ 등이었다.

2004년 5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신문고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시장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초석이며,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해 경품 금지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와 신문 판매 부문에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2004년 5월에는 ‘이제는 언론개혁이다’라는 대주제 아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과 함께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그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주최단체들은 이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된 언론개혁 의제에 끌려가지 않고 관련 논의를 이끌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임을 밝혔다. 2004년 6월에는 언론개혁국민행동 결성에 참여하여 언론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한 실천 행동에 동참했다.

특히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통과 이후 조선, 동아에 의해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응해 위헌 소송의 부당성을 알리는 토론회, 기자회견, 공개변론 등에 학회주관 또는 회원 등의 참여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신문법 옹호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공했던 학회 활동의 연장선인 학술운동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2) 기타 정책 관련 활동

방송법 제정 이후 위성방송 도입과 관련하여 학회는 1999년 12월 3일 ‘바람직한 위성방송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통해 위성방송에 관한 장밋빛 전망과 우려를 객관적으로 조망하였다. 이는 ‘위성방송 도입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매체의 도입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었다.

최근 2008년 3월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회장들과 함께 학회 회장인 강상현 교수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참여이고, 학술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4월 18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 또한 대중과 호흡하는 학술운동의 일환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

2) 기타 미디어 쟁점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시절부터 공동 주관해온 선거보도감시연대 활동은 학회에 이르러서도 꾸준히 이루어진 대표적인 미디어 감시 활동이다. 이와 더불어 학회는 학회 출범 이후 언론 관련 현안 발생 시마다 학계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선 1998년 7월 3일 학회는 언론노련, 기자협회, 피디연합회 등과 함께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정보주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쉽게 작용하는 연합통신의 소유구조를 바꾸고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학술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연합통신의 문제를 개별 뉴스통신사가 아닌 국가 정보 주권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국제 정보 흐름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의 시정에 관한 정의의 문제였다.

학회의 학술운동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은 안티조선 활동이다. 학회는 2000년 9월 20일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에 참여했고, 2003년에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안티조선 운동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티조선 운동에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규정한 대로 안티조선 운동은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으로 언론학술연구단체의 이론적 작업을 넘어 전형적인 학술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미디어 쟁점에 언론정보학회가 적극 개입한 것은 ITV 문제이다. ITV는 공익적 민영방송을 통해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경인방송노조와 비리로 점철된 대주주 동양제철화학의 갈등이었으며, 학회는 초기

부터 공익적 민방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재허가 절차 당시 동양제철 화학의 퇴출을 주장했으며, 이후 경인 TV의 허가 취득까지 경인방송 노조 출신인 희망조합의 공익적 민방 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기자회견, 성명서 그리고 2005년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유화되고 있는 민영방송들의 개혁에 힘을 실었다.

3)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여

언론정보학회가 일반적인 사회적 쟁점에 관해 조직적 대응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언론의 왜곡에 의해 사회 제 집단이 곤란을 겪을 경우 이를 명확히 밝히고, 개선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언론을 연구하는 학술집단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회는 2003년 4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인권센터·참교육학부모회 등과 16일 ‘서 교장 사망과 전교조 관련 보도’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것은 서 교장이 차 시중을 했다는 비정규직 교사의 주장을 부인한 후 자살하였으나 유서가 없어 경찰이 자살 동기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서교장이 심부름시킨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아 자살했다는 식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토론회였다. 이는 전교조에 대한 언론의 일방적 왜곡 보도를 지적하는 것으로 전교조에 대한 보수 진영의 왜곡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사회운동과 학술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활동이었다.

학회는 또 2005년 7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테이프(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일보가 불법도청만을 집중 부각해 홍석현 씨와 삼성 보호에 급급해 하고, 조선일보 또한 자사 이기주의적인 몰타기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언론의 왜곡보도를 비판하였다. 언론은 사건의 본질인 경제·언론·정치·검찰 유착이라는 점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또 학회는 2005년 12월 13일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황우석 신드롬과 PD수첩, 그리고 언론보도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당시 PD 수첩

은 황우석 관련보도로 권력, 황우석 지지지는 물론 여타 언론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아 프로그램 폐지 직전까지 갔던 상황으로 진실을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실천을 한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4) 학단협과 학술연대 활동

주지하다시피 학단협은 진보적 학술운동의 연대단체로서 1988년에 발족되었다. 초기 한언연 시절부터 학단협에 참석했던 학회는 이후 언론정보학회로 전환한 이후에도 꾸준히 학단협의 회원단체로서 연대활동을 지속해왔다.

학단협과의 학회의 연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학단협의 운영위원으로 학회의 구성원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학단협 초기부터 이루어져왔던 운영위원 결합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단협의 활동사항이 학회 집행부에 전달되고, 학단협에 대한 학회의 의견이 전달되는 소통의 통로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는 학단협의 연합심포지엄의 참가이다. 연합심포지엄은 해당 시기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단협 산하의 회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참가하기에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가장 비중 있는 행사이다. 언론정보학회 역시 ‘해방 60년의 한국사회’(2005), ‘한미 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사회 대안적 발전 전략’(2006), ‘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1987년, 1997년 그리고 2007년’(2007) 등 최근까지 무게 있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학단협의 학술운동 활동에 비중을 더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학단협의 대외 활동에 대한 연대이다. 이 경우 학단협 자체가 연대체이기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활동은 회원단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목상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정보학회의 학단협 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체 학술운동 진영의 약화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제도화된 국가 학술정책에 포섭된 학술운동 단체들이라는 구조적 상황, 그리고 제도화의 틀 속에서 개별화되는 학술운동의 초기 주체들과 후속세대 재생산의 미흡이라는 주체적 상황 속에서 학술운동 연대의 점진적 약화가 학단협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고민의 지점이다. 언론정보

학회의 학단협 연대 활동 역시 다소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다. 학단협의 운영위원으로 참여, 연합심포지엄 참여 등이 조직적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회의 역량을 반영하기보다는 참여자의 개별적 역량에 맡기는 상황이다. 더불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단협과 학회의 연대 활동은 학회의 비분질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소홀이 지나친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정보학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단협 산하 전체 회원단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언론정보학회의 경우에서 보듯 개별 학회 및 학술단체들이 대중화되고 성숙한 만큼 학단협이라는 연대체를 통한 전체 학술운동 진영의 변화와 성장 역시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7. 맺음말

비판적 학술운동을 표방하며 소수의 젊은 연구자 중심으로 출발했던 학회는 20년의 세월 속에서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 성장과정 속에서 일궈낸 성과 역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연구회’에서 ‘학회’로 자기변신을 이루면서 언론학계의 주요 학회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년 전 경계에서 서성거리던 비판언론학의 지평을 제도적 학문의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언론학 방법론의 한 영역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비판적 학술운동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초기의 학술연대 운동, 언론연대 운동에 이어 1998년 이후 학회의 모습 속에서도 언론정책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학회의 실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음의 <표 1>은 1988년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창립 이후 20여 년간 진행된 학회의 주요 활동을 보여준다.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학회가 성장을 했지만, 1980년대 중반에 출발했던 대부분의 비판적 학술운동 진영이 그러하듯 한국언론정보학회 역시 동일한 딜레마를 내부적으로 안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회라는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다. 물론 연구회에서 학회로의 전환은

<표 1>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요 일지(1988~2008)

1988.02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회’ 창립
1988.08	‘한국사회언론연구회’로 명칭 변경
1988.09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보 창간
1988.11	학술단체협의회 결성
1992.02	선거감시연대회의(선감연) 결성
1992.07	『한국사회와 언론』(반년간) 창간
1992.10	방송바로세우기 시청자연대회의 창립
1996.12	국민주방송설립운동 결합
1998.0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로 전환
1998.08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창립
1998.가을	『한국사회와 언론』을 『한국언론정보학보』로 제호 변경
2000.09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참여
2001.03	신문개혁국민행동 참여 (3월)
2003.	학보, 연 4회로 중간 발행
2003.06	지역언론개혁연대 구성
2003.12	학회 기획보도상 신설
2004.02	2004 총선미디어감시국민연대 결성
2004.06	언론개혁국민행동 결성
2005.10	매체자본연구회 분과 설립
2006.	학회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정관 개정 등 학회 제도 정비
2006.07	학회 상설 사무국 개소
2006.07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6.08	문화정치연구회 분과 설립
2006.08	학보에 기획논문 섹션 신설(35호부터): 학보정체성 강화
2006.09	남북학술토론회 개최
2007.04	학회 우수논문상 제정
2008.06	한국언론정보학회 윤리규정 제정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발맞춘 것이며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소수 중심이던 언론학계의 학술운동이 학회로의 변신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가운데 학술운동의 저변을 넓혔고 대중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학술연구와 장려를 목적으로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한” 학회는 공동체적 전문적인 연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정체성이 약한 학술단위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비판적 학술운동에 방점을 두면서 출발했던 학회들 대부분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1984년 ‘한국산업사회연구회’로 출발하여 1990년대에 학회로 전환한 ‘산업사회학회’의 경우 민주화의 진전과 폭넓게 진행된 제도화 속에서 학회의 분화와 변화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 경계 허물기, 후속세대의 참여 공간 확대, 비판성의 외연확장과 내포적 심화를 통해 학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조희연, 2007). 1987년 창립되었던 ‘한국사회경제학회’의 경우는 정치경제학 연구자 집단으로서 진보경제학의 확립을 변화된 상황의 돌파구로 제시하기도 한다. 즉, 한국 현실을 반영하는 실증연구의 축적으로 독자적이고 주체적 진보경제학의 확산과 발언권 확대, 진보경제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 건설적 비판과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이병천, 2007).

한국언론정보학회 역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실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인 학회 활동을 통해 종종 나타난다. 학회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학술단체’이기에 사회적 연대나 발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술운동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차이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는 외연적 확대는 성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부적 이견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학술운동의 실천적 차원으로 외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학회의 현실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언론개혁, 미디어쟁점, 사회쟁점에 관한 학회의 활동은 2005년 후반기를 전후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학회가 비록 다양한 학술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활동의 참여 폭이 소수에 집중되는 측면 역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한국언론학회, 한국방

송학회 등 언론 유관학회에 대부분 중복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회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언론 관련 학회의 하나로만 위치지워질 것이다. 때문에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비판언론학과 비판적 학술운동을 학회활동의 중심에 두면서 학술 활동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공공성, 언론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사안에 대응하는 시기적절한 학술활동 및 연대 활동의 유기적 조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학보’의 내용성이다. 학보는 해당 학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시절 발행했던 『한국사회와 언론』(10호까지 발행)은 초기 비판적 학술운동의 고민을 담보했다. 각 호마다 특집 섹션을 통해 해당 시기의 언론상황을 점검했고 비판언론학의 쟁점을 넓혀나갔다. 이와 더불어 기획논단, 연구논단, 정책과 제언 등의 섹션을 통해 소장 연구자들의 학술운동적 고민을 반영했다. 이에 반해, 한국언론정보학회로 전환된 이후 발간된 『한국언론정보학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회원들에 의해 투고된 일반논문으로만 채워진다. 이는 ‘연구회’에서 ‘학회’로의 전환에 따른 당위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학회원의 증가와 학회의 외연확대 속에서 학보의 정체성 논란을 낳고 있다. 요컨대, 언론학 관련 여타 학회의 학보와 내용적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학보 35호(2006년 여름호)부터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의 영역으로 나누어 섹션을 구성함으로써 학보의 정체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보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일반논문의 내용에서도 비판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타 학보와 명확히 구분되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회의 외연확보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학회의 성장 속에서도 학회의 정체성 확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학회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성과 중 하나는 비판언론학의 질적

성장과 확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언론학 내에서 비판언론학의 영역을 확장했고, 또한 이를 대학 제도권 내에 정착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위를 떨치고 있는 실증적 연구경향과 학문의 제도화 속에서 비판언론학의 후속세대층이 점차 얇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회 초기의 소장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자리하면서 비판언론학의 확대와 정착이라는 긍정성을 담보했다. 이의 연장선에서 비판언론학 영역의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및 지원 역시 이들에게 부과된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제도권 진입은 수도권이 아니거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이 아닌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판적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회 차원에서 분과의 활성화 역시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비판언론학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학문적 분화 역시 진행되고 있다. 양적 성장을 넘어 학회의 질적 성장 및 확대된 외연을 내부적으로 심화하기 위해서는 학회 내의 분과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고민과 맞물려 있는 지점이기도 하며, 다원성 속에서 학회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분명 학회의 섹터주의를 거부한다. 비판적 학술운동의 측면에서 볼지라도 ‘끼리끼리’적인 섹터주의는 분명 극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판언론학과 비판적 학술운동을 통해 학회의 정체성을 바로 하자는 것과 섹터주의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학회의 외연의 확대와 경계 허물기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보다 풍부한 내용성을 가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경우 (2002). 지식인과 지식생산. 『모색』, 3호, 12~24.
고성국 (1991). 90년대 학술운동의 과제와 전망. 『동향과전망』, 통권 12호, 300~312.

- 금인숙 (1999). 억압적 정권에 도전한 지식인: 80년대 진보적 학술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경제와사회』, 통권 41호, 208~236.
- 김동춘 (1988a). 학술운동의 현황과 전망. 『현상과인식』, 제12권 4호, 89~106.
- _____ (1988b).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의 위상과 학술운동. 『경제와사회』, 제1권, 101~130.
- _____ (1999). 1980년대 이후 학술역량의 성장과 학단협의 출범. 『학단협 10년사』 (16~24쪽). 학술단체협의회.
- 김서중 (1989). 한언연의 88년도 활동평가와 89년의 당면과제.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보』, 4호, 34~36.
- 김 원 (2008). 1987년 이후 진보적 지식생산의 변화: 진보적 지식공동체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77호, 33~57.
- 박용규 (1989). 학술단체협의회 발족에 부쳐.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보』, 3호, 28~29.
- 신태섭 (1989). 현금 정세와 학술운동.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보』, 4호, 31~34.
- 오창은 (2002). 진보의 진보는 불가능한가: 학문과 제도의 긴장. 『모색』, 3호, 53~65.
- 이병천 (2007). 민주화 20년, 한국사회경제학회 20년: 전환시대 한국 진보경제학의 길. 『사회경제평론』, 제29(1)호, 11~48.
- 이용준 (1989). 수련회를 다녀와서.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보』, 4호, 30~31.
- 이진로 (1988). ‘한컴연’에서 ‘한언연’으로.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보』, 창간호, 20~21.
- 임재홍 (2005).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해방 60년의 한국사회: 역사적 궤적, 현재 속의 미래, 학문재생산』(395~422쪽).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항제 (1989). 89년 활동사업과 계획.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보』, 5호, 6~8.
- 조현연 (1999). 오늘의 학술운동 이대로 좋은가: 학단협 10년의 반성적 성찰과 작은 대안 찾기. 『학단협 10년사』 (25~35쪽). 학술단체협의회.
- 조희연 (2007). 포스트 민주화 시대 비판사회학회의 혁신적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와사회』, 37호, 6~17.
- 천보선 (2000). 신지식인 교육 패러다임의 신자유주의적 본질과 문제점. 『진보평론』, 5호, 65~93.

- 최갑수 (1998). 인문학의 자기 혁신을 위한 제언. 『1998 지식인 리포트』. 민음사
- 최형익 (2003). 1980년대 이후 한국 마르크스주의 지식 형성의 계보학. 『문화과학』, 통권 34호, 195~213.
- 한국사회언론연구회(1988). 창간사-커뮤니케이션 인식론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보』, 창간호, 3.
- 학술단체협의회 (1999). 학술단체협의회 창립선언문. 『학단협 10년사』(340~341 쪽). 학술단체협의회.

(투고일자: 2008.05.31, 수정일자: 2008.07.10, 게재확정일자: 2008.07.21)

A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 Information Studies (KACIS) for 20 Years

Reflection on the Critical Academic Movement

Suh-Jung Kim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SungKongHoe University)

Eun-Gyoo Kim

full-time lecture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Woosuk University)

KACIS was established in 1988 for critical academic movement in communication area. For 20 years after establishment, KACIS has grown into major academic socie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reflection on the history of KACIS for 20 years. For this, this article review three areas on KACIS. First, It examine how critical academic movement that was initiated in middle of 1980s was changed in gear with Korean Society's shift. Second, It turn around the activity of 'Korean study group for society and communication', the predecessor of KACIS, which operate during 1988~1998. Third, it consider KACIS's activity after convert to association, during 1998~2008. When look back to 20 years of KACIS, first of all, the biggest fruit is to extend critical communication in academic area. However, several controversies exist about KACIS's identity. Conclusively, this article emphasize, for further development, organizing organic academic conference about social pending issue, strengthening journal's identity, fostering future academic generation, vitalizing research divisions.

Key words: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 Information Studies(KACIS), Korean Progressive Academy Council(KPAC), Critical Academic Movement